

##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2018년 7월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가 한미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4월 28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평화협정 때 주한미군 문제는 우선적으로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북한과 협상할 이슈 중 일부”라고 발언하였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월 30일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 5월 3일자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게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6·12 공동성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아니나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핵화와 평화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중요한 협의 사항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로서 평화협정과 상관없다.”고 진화하였고, 7월 12일 싱가포르 신문인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못박았다. 백악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검토가 사실무근이라고 하나,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먼저 주한미군 주둔의 국제법적 측면과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관련 유관국의 입장을 고찰하려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북미수교가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 역대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려 한다.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정치와 경제, 군사안보, 국제역학관계, 파리평화협정의 교훈, 통일한국의 국가전략, 지역 안정 등 다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정 체결 및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의 위상과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주둔 근거와 해외 미군주둔 사례

주한미군 주둔의 국제법적 근거는 1954년 11월 18일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979-11-88772-32-2 95340

##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와 제3조에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협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 등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이므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더 이상 북한과 적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주일·주독 미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에 서명한 미일안보조약에 의거, 현재 44,000여명이 주둔하면서 미일안보조약 제1조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처하고 있다. 한편 주독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 4개국의 독일점령 체제가 1955년 발효된 파리조약에 따라 종식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독일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3국은 1954년 공동으로 독일과 ‘독일 내 외국군 주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현재 34,000여명의 주독미군이 동서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이후에도 지역 안정을 위해 나토의 일원으로 계속 주둔하고 있다.

###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미래 관련 유관국의 입장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미래에 관한 유관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베이징, 칭따오, 따롄 등 전략적 중심에 비수(匕首)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 커졌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The Anti-Access & Area Denial Strategy)과 도련선 전략(The Chain Island Strategy)을 봉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안사태, 센카쿠/다

오위다오 영토분쟁, 남중국해 분쟁 시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는 물론 오산·군산 기지와 평택군항은 우발사태 지역으로 미군전력을 재전개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힘과 강압에 의해 국제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주한미군에 대해 북한은 전형적으로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다. 북한은 북미수교 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내밀한 입장을 보여 온 반면, 공개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고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의 1992년 아놀드 칸터(Arnold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회담에서 “북미수교만 해주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다. 또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대화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에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남쪽에 있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미군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미 국무부 장관도 2000년 10월 24일 평양 방문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대화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냉전 이후 북한 정부의 시각은 변했다. 미군은 현재 안정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대화에서도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북한은 미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주적으로 되려면 나라가 주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적이 될 이 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김일성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확고한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정은은 2012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특히 2016년 5월 10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해”와 북한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 개정 서문에 “조선노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족역량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무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대남적화 전략목표 달성에 있어 최대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6·25 남침 시 낙동강까지 점령을 했는데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무력적화 통일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한다는 피포위 의식이 강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미관계의 밀착에 민감한 이유는 베트남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베트남 전쟁 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통일된 이후 중국과 갈등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미국 세력권에 편승,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쌍중단,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추진하지는 쌍궤병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서 수시로 전개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에게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 전체를 중국 질서에 급속도로 편입시킬 수 있으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바퀴살 구조(hub-spoke)가 소멸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중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다.

반면, 일본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위협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일본 열도 방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한다. 지난 5월 3일 아베 신조 총리는 22만 5천 명의 자위대 병력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되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중 간에 치열한 군비경쟁과 지역패권 경쟁으로 치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 역대정부, 국가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희망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 역대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동맹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통일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통일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바, 북미 국교정상화를 화해협력과 평화공존단계의 기점으로, 통일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평화공존단계에서는 북핵·미사일 폐기를 공동 목표로, 통일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지역 안정자로 변경하여 지속 주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고 보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30일 한미정상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것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라고 강조한다. 2017년 11월 8일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평택기지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공히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기본축이며,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 여부 고찰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정치,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와 철수 시 경제적 파장, 중국의 세계전략 대응 및 한반도 유사시 제해권 차단, 파리평화협정의 교훈, 통일 한국의 안보전략 및 동북아지역 안정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측면에서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이 안보의 기본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은 주한미군이며, 북한 공산주의의 무력남침으로부터 미군이 참전하여 조국 강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고, 주한미군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억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동맹국에 대해 깊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주한미군의 감군에 대해서도 국민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동맹군과 온전히 함께 해야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의 군사위협으로부터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는 의식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가 쟁점화되는 순간 진보-보수 간 갈등과 정치적인 불안정을 초래하여 통치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와 철수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심대할 것이다. 28,500여명의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가치는 약 17~3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만큼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전시에 미 증원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군이 보유한 유사시 필수 소요 전력인 전쟁 예비탄(豫備彈)만도 5조원에 달한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은 얼마나 증액이 되어야 현재 수준의 전비태세, 즉 전쟁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경제모형(KODEM-II)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경우, 우리의 국방비 부담은 2018년 국방비인 44조 1581억 원의 대략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동근이 연구한 헤도닉(Hedonic) 가격모형에 의하면, 미군 철수 시 GDP 성장률이 1.2%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주한미군 및 그들 가족의 소비지출과 1만여 명의 한국인 고용, 대북 억제력 제공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가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미군의 가치도 상당하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경우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이다. 한국 증권시장은 외국인 매도 38%, 국내 대주주 35%,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주주 중 80%가 미국인이다. 미국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제활동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동의 산유국에 압력을 가해 한국에 석유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은 마비될 수도 있다.

한편,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서해의 제해권 차단과 전투기 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해에 대한 제해권 장악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임진왜란, 청일·러일전쟁, 6·25 전쟁에서도 서해에서 누가 제해권을 장악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주한미군은 증원전력과 함께 제공권 장악과 미사일 방어를 통해 7함대와 더불어 우리 해군의 서해진출을 보장하여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미사일 폐기 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북한의 특수전, 장사정보, 잠수함, 사이버 위협 등 재래식 전력의 위협은 여전히 엄존하므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일별하면 우리에게 중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1973년 1월 25일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0일 이내에 외국군은 철수한다는 합의에 따라 3월 29일 미군과 주월한국군은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사이공의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 철문을 돌파하여 북베트남 깃발을 걸면서 남베트남을 패망시킨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지 2년 만에 베트남은 적화통일이 된 것이다.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었고 전략도 없으며 부패했던 남베트남은 결국 무너졌다.

통일한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주변국의 한반도 헤게모니 차단과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략적 요충지역으로서 끊임없이 분쟁의 진원지였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힘의 진공이 발생하면 주변국들이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역 패권세력의 등장을 차단하는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평화협정 체결 및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의 위상과 유엔사의 미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에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예방자, 통일 과정에서는 한반도 내부 상황을 관리하는 운영자이자 조정자, 통일 이후에는 지역 안보체제의 균형자로 진화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평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역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다자안보체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국들이 주한미군과 그 전력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과 보다 적극적인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아태지역에서의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 해상수색 및 구조, 해로 안전 확보, 해적·마약밀매 등의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 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WMD 개발을 추구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차단 등의 보다 광범위한 임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17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기초하여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구조로,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現 연합사와 유사한 지휘·참모체계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창설을 추진 중이다. 2018년 2월 14일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 장군이 미래연합사의 부사령관으로서 역할 변경과 미국 국가통수기구 통제 하에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존속된다.”라고 보고한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보장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신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년 중으로 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역내 청사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창설 준비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9일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인 444만평의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준공식을 치렀다. 이는 북한 위협 관리에 주안을 둔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개막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자 역할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사 존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었을 때 유엔사는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과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유엔안보리의 유엔회원국 참전권고 결의 84호와 유엔군사령부 창설과 미국 정부의 사령관 임명 결의 85호에 따라 유엔사는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를 남북공동관리위원회로 대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973년 파리평화협정 후 북베트남이 무력통일한 사례와 정치협상에 의해 통일을 하였으나 북예멘이 무력으로 재통일을 한 예멘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을 약속한 유엔참전 16개국의 결의가 무효화됨은 물론, 유엔사와 일본 정부 간 체결한 SOFA 협정에 따라 주일미군 7개 해·공군기지를 운용할 수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권한이 소멸된다. 차후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참전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를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유엔사 존치(存置)를 제안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 해체 협의를 할 경우 미국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여 존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전협정 관리의 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유엔사는 평화협정 체결 시 평화유지 임무로 전

환하고, 전작권 전환 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유엔사는 전력제공(Force Provider)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전투부대의 전술통제(Tactical Control)를 미래연합사령관에게 전환하여 단일지휘체제에 의해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 이어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향후 평화협상이 전개되면 한국은 안보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흑여 핵 동결과 핵확산 방지,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폐기선에서 타협하거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일대 안보의 도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한미군 철수 시 안보공백에 따른 국내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파장,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서의 린치핀 상실,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가능성, 통일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추진 제한, 한반도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주변국 군사개입 개연성, 지역 패권경쟁의 격화 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 것이다. ■

— 집필 **정경영**\_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에서 군사전략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국방대와 가톨릭대에서 교육전담교수를 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직인수위 및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통일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2017),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2015),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 동맹》(2009, 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_최수이 EAI 연구원  
문의\_02 2277 1683 (ext. 105), schoi@eai.or.kr

